

위기에 처한 한국농업



국민들의 기초 식량과 공산품 제조에 쓰이는 원료를 제공하며, 자연환경과 지역사회·경제·문화를 책임져야 할 핵심 기간산업인 한국 농업은 지금 총체적인 붕괴의 위기를 맞고 있다. 10년 전 오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을 당시와 너무나 꼭 닮은 식상한 애깃거리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올 9월 故 이경해 열사께서 한국 농업의 위기를 피눈물로 고발하기 꼭 12년 전, 스위스 제네바 GATT 사무국 앞에서 자결을 시도했을 그 당시조차 언론 및 학자들은 “농촌에 애기 울음소리가 그쳤다” “한국 농업을 책임질 후계인력이 없다” “전면적인 농산물 시장 개방 위기에 직면했다”며 호들갑이었다. 정부는 “농업경쟁력 강화” “전업농 육성” “전면적인 농정 개혁”과 같은 식의 판에 박힌 농정대책을 붓물처럼 쏟아냈다.

1994년, 많은 사람들이 김영삼 정부의 ‘42조+15조 농업투융자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비판을 쏟아낼 때조차, 한국 농업이 지금과 같은 최악의 농업해체 위기로까지 몰리게 될 것이라고는 아

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정부의 공식문건에 나오는 “돌아오는 농어촌”과 같은 장밋빛 환상까지는 아니더라도, 400만 농민들은 최소한의 기초생존권과 민족 식량주권만큼은 어렵사리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자신의 농토에서, 여의도 아스팔트 위에서 소금땀 흘려가며 일해 온 것이다.

하지만 이제 400만 농민들 앞에 남겨진 것은 IMF 환란 이후 눈덩이같이 불어나는 농가부채, 형편없는 농축산물 가격과 농가소득, 태풍 “루사”와 “매미” 등 잇단 자연재해로 찢기고 부서진 농촌현실만큼 암담한 우리 농업·농촌·농민 모두의 미래뿐이다. 농촌 최일선에서 우리 농업을 지켜가는 400만 농민들의 기초생존권 위기는 결국 국가 식량안보와 국민경제 전체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협하게 되어, 우리 농업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생존권에 대한 심각한 위기로 번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 농업·농촌·농민문제에 대한 넓고도 깊은 안목과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종 통계수치로

● 1990년대 이후 농가교역조건 변화 추이(1995년 = 100.0 기준)

구 분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농가판매가격지수	73.7	100.0	105.2	102.2	101.9	108.5	109.6	116.4	122.3
농가구입가격지수	75.4	100.0	104.3	106.7	118.0	121.2	127.5	139.4	148.9
농가교역조건	97.7	100.0	100.9	95.8	86.4	89.5	86.0	83.5	82.1

주 : 농가교역조건 = 농가판매가격지수/농가구입가격지수×100

자료 : 농협중앙회 조사부, 2003

나타나는 한국 농업위기의 적나라한 현실을 함께 고민해보자.

보리농사 망하고 고추농사 조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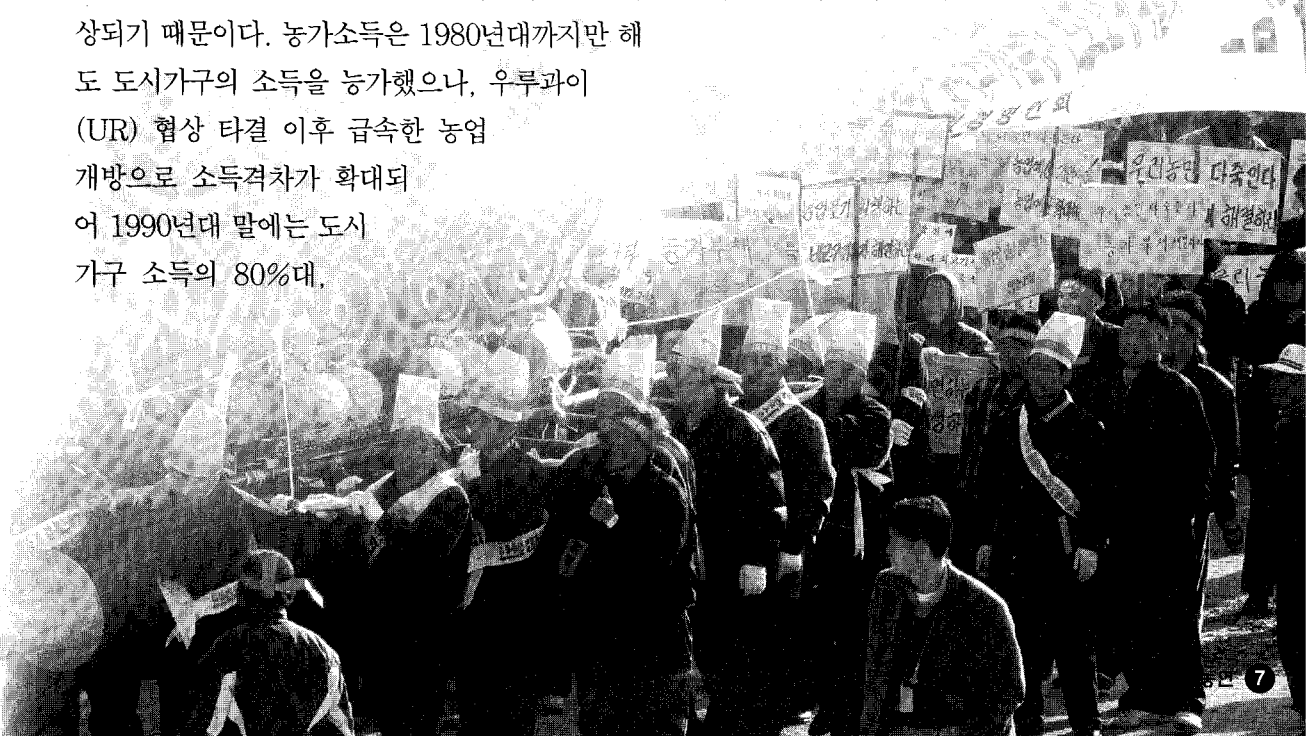
남은 것은 빚더미뿐!

10월 6일자 한국일보는 농림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올해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6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전했다. 23년만의 대홍작으로 농가소득이 평균 2~3% 감소한 반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4.2% 늘어나,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3,350만원)의 73%였던 농가소득(2,447만원) 비율이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가소득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도시가구의 소득을 능가했으나, 우루과이 (UR) 협상 타결 이후 급속한 농업 개방으로 소득격차가 확대되어 1990년대 말에는 도시 가구 소득의 80%대,

2000년 이후에는 70%대로 떨어진 것이다.

위의 표와 같이 1995년 기준(1995=100.0) 농가교역조건(도표 내 공식 참조)은 1996년을 정점으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급격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1998년의 IMF 환란 등으로 국내 농축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한 반면, 각종 생필품과 공공요금·농업관련 자재 등의 가격은 급등하여 농가구입가격지수는 1999년 이후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이다.

농가교역조건 악화는 곧 농가경제 및 농촌경제 전체의 총체적 부실을 낳았다. 그리고 이는 심각한 농가부채 문제를 더욱



● 가구당 평균 농가부채 통계(단위 : 만원)

구 분	한농연(2002. 5)	한농연(2003. 5)	청원군의회(2003. 6)	통계청(2002)
금액(만원)	12,615	14,037	8,892	1,990

주 : 만원 단위 이하 수치는 반올림으로 절사

악화시켰다. 2002년과 2003년 한농연이 전국 시군·읍면동회장 및 일반회원을 대상으로 한 우편 설문조사 결과, 아래와 같이 평균 농가부채 규모가 늘어나는 등 심각한 양상을 띄고 있음이 드러났다. 특히 2002년도 한농연 농가부채 설문조사에서 농업경영인들은 농업자본수익률 5%를 훨씬 능가하는 평균 9.6%의 고금리를 부담하며 영농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비슷한 시기 청원군의회에서 조사한 가구당 농가부채 평균액 또한 8,892만원에 달하였다.

반면 유사한 시기 통계청이 조사한 가구당 농가부채 평균통계(2001년 2,037만6천원, 2002년 1,989만8천원)는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의 조사치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나 정부의 공식 통계에 대한 불신마저 낳고 있다. 정부의 보다 정확한 농가부채 실태 조사를 통한 근본적인 부채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가부채대책법'은 상호금융대체자금 및 농업경영자금 금리 인하·각종 신규 농업자금의 금리 인하

에는 매우 인색하여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심각하게 악화된 농가부채 문제는 결국 농민생존권의 총체적 위기를 낳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농가부채 문제를 비판한 농민들의 자살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며, 부채를 갚지 못해 농지 및 농업시설을 경매처분 당하는 농가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아래 표와 같이 이우재, 정장선, 주진우 의원이 공동 제출한 농림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금년 4월까지 16개월간 부채를 갚지 못해 담보물을 경매처분당한 조합원은 36,584명 금액은 1조 513억 7,600만원으로, 98년부터 2000년 7월까지 31개월간 11,354명 4,788억 9,600만원에 비해 조합원수는 3.2배, 금액은 2.2배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농업과 민족 식량주권의 총체적 붕괴 위기

위에서 살펴본 농가경제·농촌경제의 위기는 곧바로 전체 한국 농업과 민족 식량주권 수호의

● 조합원 담보물에 대한 경매 내역(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1998. 1. 1 ~ 2000. 7. 31		2002. 1. 1 ~ 2003. 4. 30		비교	
	조합원수(A)	금액(B)	조합원수(C)	금액(D)	C/A	D/B
계	11,354	478,896	36,584	1,051,376	3.22	2.20
월 평균	366	15,488	2,287	65,711	6.20	4.30

자료 : 이우재, 정장선, 주진우 의원 2003년 농림부 국정감사 자료(2003. 9. 22)

● 연도별 식량자급율 관련 지표(단위 : %)

연도별	전체	쌀	보리쌀	밀	옥수수	두류	서류	기타
1970	80.5	93.1	106.3	15.4	18.9	86.1	100.0	96.9
1980	56.0	95.1	57.6	4.8	5.9	35.1	100.0	89.8
1990	43.1	108.3	97.4	0.05	1.9	20.1	95.6	13.9
1995	29.1	91.4	67.0	0.3	1.1	9.9	98.4	3.8
2000	29.7	102.9	46.9	0.1	0.9	6.4	99.3	5.2
2002	30.4	107.0	60.4	0.2	0.7	7.3	99.1	10.2

자료 : 농림업 주요통계, 농림부, 2002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해방 이후 역대 정권은, 도시노동자의 임금 상승을 막고 부족한 정부재정과 경제개발 재원을 확보하고자 지속적으로 '저농산물 가격정책'을 강요해 왔다. 故 이경해 열사의 희생에도 아랑곳없이 최근 정부 고위당국자들이 잇따른 "농업개방·쌀 관세화 불가피론"만언 또한 이러한 맥락을 통해서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공산품 수출을 늘리기 위해 농업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식의 구시대적 사고방식이 "GDP 2만불 달성"과 같은 허울뿐인 구호 속에서 망령처럼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농정철학 부재 속에서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농업과 민족 식량주권의 총체적인 붕괴 위기는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서 식량자급도(사료용 포함 전체양곡 기준)은 2002년 현재 30.4%에 불과하여 전체 국민의 세 끼 식사 중 한 끼마저 책임지지 못할 정도로 우리 농업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밀·콩·옥수수 등 사료작물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으며, 그 중 60%가 넘는 물량을 세계 최대의 곡물메이저 회사인 카길에 의존하고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카길과 같은 곡물

메이저 회사들이 미국 등 농산물 수출강대국들의 WTO 농업협상 초안을 자신의 입맛에 작성하여 관철시키려 노력함으로써, 한국과 같은 농산물 수입 개발도상국은 식량주권 파탄의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같이 위험천만한 국내 농업과 식량주권 붕괴의 위기를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故 이경해 열사께서는 생명을 다해 온몸을 던졌다는 것을 노무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정부 고위인사들의 "쌀 관세화 불가피론"과 같은 농업·농민포기 시사 발언은 400만 농민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 80년 이후 최저인 3,121만석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극심한 흉작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정부는 전체 식량자급율 향상 및 주곡자급 유지를 위한 정책대안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민족 식량주권 수호를 위한 정부의 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거대한 양로원이 되어버린 농촌, 열악한 농어촌복지의 현실

오래전부터 우리 농촌은 거대한 양로원이 되어

● 연령계층별 농림어업 취업자(단위 : 천명)

연도	총수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이상
1995	2,403	5	35	63	131	207	224	242	289	383	823
2000	2,243	5	28	47	79	140	191	213	238	315	988
2001	2,148	6	20	41	63	121	177	205	229	288	998
2002	2,069	4	17	29	52	93	170	202	218	271	1,013

버린 채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젊고 유능한 영농 인력이 농촌 현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농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아래의 표와 같이 영농인력인 지속적으로 노령화·부녀화의 길을 걸어오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후계 영농인력 육성은 농업·농촌회생을 위한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의 후계 영농인력 육성 정책은 그 체계가 불분명하고 중구난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후계농업인 육성사업, 전업농 육성사업 등 사업별 목적 및 체계가 애매모호함), 이들의 안정적인 영농 현장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마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같이 정부의 농업인력 육성 정책이 표류하는 와중에서 농업인력은 갈수록 아래의 표처럼 지속적으로 그 숫자와 질적 수준이 악화되고 있다. 한국 농업 및 식량안보를 책임질 핵심 인력이 제대로 형성되지도 충원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성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절실하다.

앞에서 언급한 낮은 농가소득과 심각한 농가부채 문제는 가뜰이나 어려운 농가경제·농촌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 농촌의 열악한 복지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교육·의료·문화·교통·환경 등과 관련된 사회기반시설은 물론이거니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농어촌복지 문제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지표인 지역별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현황을 살펴보자. 아래에 제시된 두 개의 표는 1998년 현재 지역별 의료기관 분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대체로) 도시지역을 뜻하는 '시부'에 해당



하는 지역의 의료기관 수는 34,588개소의 90.2%, 병상은 89.4%에 달하고 있는 반면, 순수한 농촌지역만을 뜻하는 '군부'는 각각 9.8%와 10.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료인력 문제를 살펴보면 더욱 심각하다. 1998년 현재 전체 면허등록 의료전문인력 중 순

수 농촌지역인 '군부' 지역에서 활동중인 인력은 15,117명(6.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마저도 1990년대 후반 의약분업 이후 대거 수도권 및 대도시의 '돈벌이 되는' 대형 의료기관 쪽으로 몰리면서 심각한 의료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보건소마저도 지속적인 인력

● 의료기관 분포현황(1998년, 단위 : 개소, 개, %)

기관종별	계		시 부		군 부	
	기 관	병 상	기 관	병 상	기 관	병 상
합 계	34,588(100.0)	236,187(100.0)	31,193(90.2)	211,260(89.4)	3,340(9.8)	25,127(10.6)
종합병원	255(100.0)	100,937(100.0)	242(94.9)	98,586(97.7)	13(5.1)	2,551(2.3)
병 원	562(100.0)	72,686(100.0)	432(76.9)	58,403(80.3)	85(23.1)	14,283(19.7)
치과병·의원	9,684(100.0)	81(100.0)	8,847(91.4)	81(100.0)	837(8.6)	-
한방병·의원	6,697(100.0)	6,177(100.0)	6,037(90.1)	5,981(96.8)	660(9.9)	196(3.2)
의 원	17,041(100.0)	55,663(100.0)	15,317(89.9)	47,588(85.5)	1,724(10.1)	8,075(14.5)
부속의원	216(100.0)	510(100.0)	206(95.4)	499(97.8)	10(4.6)	11(2.2)
조 산 원	133(100.0)	133(100.0)	112(84.2)	122(91.7)	11(15.8)	11(8.3)

주 : 의사와 치과의사는 보건소(지소) 종사자 미포함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1999.12.

● 의료인력의 분포현황(1998년)

구 분	면허등록 (명)(A)	의료기관종사자(명, %)			종사자비율 (%)(B/A)
		계(B)	시부(C)	군부(D)	
계	595,221	219,015(100.0)	203,908(93.1)	15,117(6.9)	37.0
의 사	65,431	47,321(100.0)	44,806(94.7)	2,515(5.3)	75.6
치과의사	16,126	11,464(100.0)	10,631(92.7)	833(7.3)	74.5
한 의 사	9,914	7,692(100.0)	7,009(91.1)	683(8.9)	79.3
조 산 사	8,590	1,176(100.0)	1,141(97.0)	35(3.0)	13.8
간 호 사	141,094	51,456(100.0)	49,253(95.7)	2,203(4.3)	38.4
약 사	46,998	3,009(100.0)	2,893(96.2)	116(3.8)	6.6
의료기사	81,539	30,565(100.0)	27,958(91.5)	2,607(8.5)	40.5
의무기록사	6,811	1,491(100.0)	1,379(92.5)	112(7.5)	24.3
간호조무사	218,718	64,841(100.0)	58,838(90.7)	6,003(9.3)	31.3

및 장비·시설 확충이 시급한 실정이며, 행정 효율화를 명목으로 한 무분별한 보건지소의 통폐합 정책 또한 농민들을 의료복지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

무분별한 개방농정으로 인한 농가경제·농촌경제의 지속적인 침체는 농어촌복지 수준의 총체적인 부실화를 낳게 되고, 이는 곧 이농현상의 가속화를 불러오게 된다. 이로 인해 지역 내에 꼭 있어야 할 각종 농어촌복지 서비스마저, 수요의 부족으로 공급량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이는 더욱 심각한 이농 현상을 낳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게 된다. 그리하여 한농연은 총 7만여명의 회원 및 일반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작년 10월 31일 '농어촌복지특별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으며, 정부의 근본적인 농어촌복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농민도 국민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400만 농민들의 간절한 요구를 정부는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총력투쟁으로 지켜내야 할 우리의 생존권!!!

현 상황에서 WTO체제가 요구하는 수준의 농업개방은 우리에게 농업붕괴와 다름없다. 하지만, 당장 오는 12월 15일에 WTO특별회의가 개최되고 2004년에는 쌀 재협상이 이루어진다. 농업의 위기가 현실적으로 코앞에 닥쳐왔다. 우리는 WTO를 반대하며 결사투쟁으로 항거하신 故 이경해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록 열사의 시신은 땅 속에 묻혔지만 열사의 정신과 우리의 투쟁의지까지 땅속에 묻혀서는 안 될 것이다. 열사의 숭고한 뜻은 우리의 투쟁으로만 되살아 날 수 있다는 것을 마음 속 깊이 되새기고, 저 악랄한 WTO체제를 향해·우리의 농업과 민족의 식량주권 사수를 위해 투쟁의 깃발을 힘차게 드높여야 한다. 위기에 처한 한국농업을 지키는 것은 우리 농민 모두의 문제이며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농업비상시국인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농민단체들과의 결속력을 다지고
강인한 연대의식으로 맞대응 해 나가야 한다. 그
러한 의미에서 '11월 19일 전국농민대회'는 농업

붕괴와 새로운 도약이라는 역사의 기로에서, 우리
농업의 희생과 400만 농민생존권 수호를 일구어
낼 중요한 투쟁이 될 것이다. **민농연**

故 이경해열사 정신계승 우리농업사수 · 쌀 지키기 · 농민생존권쟁취 전국농민대회

▶ 일시: 2003년 11월 19일(수) 오후 2시

▶ 장소: 서울 여의도

○ 의의

- ▶ 제5차 WTO 각료회의 무산과 이경해 열사의 죽음으로 인해 조성된 농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11월 19일 대회를 성과적으로 개최함으로써, 2004년 쌀 재협상 · 4월 국회의원 선거 등의 객관적 조건을 개방농정 철폐, 농민생존권쟁취라는 농민적 관심사를 대중화함
- ▶ 개방일변도 농업축소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농업정책을 대중적으로 심판하고 농업의 위기상황을 전 국민적으로 알려내어 참여정부의 올바른 농업정책을 건언하고 선도함
- ▶ 400만 농민의 단결된 힘을 대내 · 외에 과시함으로써 농민들의 현실적 문제를 농민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냄으로써, 우리농업을 지켜내고 농민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쟁취함

○ 목적

- ▶ 참여정부 농정평가와 향후 농정방향 및 중 · 장기적 농업청사진 제시
- ▶ 쌀 지키기를 위한 쌀 관세화유에 및 식량주권사수
- ▶ 농가부채 해결 및 농가소득 안정을 통한 농민생존권 쟁취
- ▶ 국내농업 위기극복과 희생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
- ▶ 농민이 주인되는 협동조합 개혁 관철

○ 핵심구호 및 주요 과제

- ▶ 우리농업 사수
 - WTO/DDA 농업협상 반대 및 쌀 개방반대 관철
 - 농업희생을 위한 농업투자 계획 및 재원확보
 - FTA 추진 반대
 - 농정공약 조기 이행
 - 학교급식법 제정
- ▶ 쌀 지키기
 - 대북 농업지원 및 남북농업교류 확대
 - 쌀 자급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 ▶ 농민생존권 쟁취
 - WTO협상 결과에 대비한 국내 농가 소득보장 정책 확충
 - 농가부채 해결
 - 협동조합 개혁
 - 농어촌복지특별법 연내 제정
 - 농업재해 지원 및 농업재해대책법 제정